

# 경제위기와 미국의 고용전략

Randall W. Eberts (미국 W.E. 업존고용연구소 소장)

## ■ 머리말

대부분의 평가에 의하면 미국 경제는 전환점을 돌았으며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길고 깊었던 경기침체에서 이제 막 벗어나기 시작하고 있다. 지난 3분기 동안 미국의 GDP는 연 2~5% 정도 성장해 왔다. 반면 고용은 이제서야 성장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2007년 12월 경기침체가 시작된 이래 8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지난 3월 26개월 만에 최초로 임금·고용이 실질적인 확대 징조를 보였다. 3월 16만 2,000개의 임금·고용 일자리가 증가한 것은 고무적인 징조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고용시장이 이례적으로 더디게 회복되고 있으며 3~4년이 지나야 경기침체 기간 동안 사라진 일자리를 충당할 수 있으며 그 이후 1년이 더 지나야 경제가 완벽한 고용상태로 돌아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1,500만 명(경제활동인구의 9.7%) 이상의 사람들이 실직상태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으며 이 중 실직기간이 27주 이상인 사람은 44%이다.

더딘 일자리 증가와 높은 실업률은 여전히 수백만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으며 현재의 경기확장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실직자 및 불완전 고용자들에 대한 지원을 국내 정책상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미국 노동부의 제인 오츠(Jane Oates) 고용 및 훈련 담당 차관보는 최근 상원 재정위원회 진술에서 이러한 두 가지 목표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sup>1</sup>

경기침체 기간 동안 이러한 의도는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2월 「미국 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 ARRA)」에 서명하면서 일자리를 보존 및 창출하고 경기침체에 타격을 받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표임을 밝힌 바 있다. 기존 프로그램에 추가적인 재원을 제공한다는 이 법안의 규정은 경기침체에 타격을 받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 법안을 통해 연방 인력개발제도에 대한 재정지원이 560억 달러 확대되었는데 이 중 450억 달러는 실업보험제도에, 약 44억 달러는 교육훈련 및 고용 서비스에 배정되었다.

미국은 이미 포괄적인 공공 인력개발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 법안 통과와 결과로 새롭게 마련된 인력 프로그램은 없었다. 하지만, 이 법안이 2009년 고용서비스와 교육훈련에 대한 연간 예산 승인액 재원을 두 배로 확충시켰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다. 또한, 고용서비스 재원 확충은 최근 몇 년간 상당한 예산 삭감을 당했던 와그너-페이셔(Wagner-Peyser) 재고용서비스 재정비에도 도움이 되었다.

경기침체 기간 동안 입안되었으며 근로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또 다른 연방 법안은 2010년 1월 의회가 통과시킨 일자리 창출 법안인 「고용회복을 위한 채용 인센티브법(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Act : HIRE)」이다. HIRE를 통해 실직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급여세(payroll tax)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금 감면 제도가 도입되었다.<sup>2</sup>

ARRA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주 세금 감면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세출 7,870억 달러 중 3분의 1은 인프라와 다른 재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 쓰였다. 3분의 1은 지출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었다.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의 최근 추산에 따르면 ARRA를 통해 약 250만 개의 일자리가 보존 또는 창출되었다고 한다. 즉 ARRA가 없었다면 현재 고용된 250만 명의 일자리가 없었을 것이다.

각 주는 심각한 재정난 때문에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더 이상 확대할 수 없다.

- 1) 2010년 4월 14일, 미상원 재정위원회, 미국 노동부 제인 오츠 고용 및 훈련 담당 차관보 연설.
- 2) ARRA는 개인에게 소규모의 세금 감면을 제공했다. 근로장려세액공제(Making Work Pay Tax Credit)라 불리는 이 제도는 2009년과 2010년 개인별 최대 400달러까지, 부부 합산 최대 800달러까지 소득의 6.2%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를 제공했다.

많은 주가 기업을 유치 및 유지하기 위해 여전히 세금 우대에 의존하고 있으나 일부 주는 세입 감소와 예산 적자 증가 때문에 이러한 우대조치를 삭감해야 했다. 따라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력 개발제도를 확대하는 대부분의 노력은 연방정부의 정책, 즉 주로 ARRA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ARRA 지출과 HIRE 인센티브는 모두 1년 안에 만료된다. 고용회복이 더디고 오래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두 개 법의 만료에 따른 상당한 재정지원 감축으로 인해 부분 소득대체를 위한 실업보험제도 및 기술 업그레이드와 구직지원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주가 심각한 재정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 재원이 삭감될 경우 주정부가 인력 프로그램 재원을 확충할 수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대부분의 주는 이미 연방정부에 빚을 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노동부는 회계연도 2010년 말까지 40개 주가 실업수당지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차입을 한 결과 연방정부에 대한 미납 채무가 9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각 주는 경기 침체로 인해 주 세입이 줄고 사회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등 심각한 예산 적자로 인해 훈련 프로그램과 기타 인력관련 서비스를 삭감하고 있다.

현재 인력개발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① 경기침체 기회를 활용해 행정관과 정책 입안자들이 인력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 ② 운영에 방해가 되며 프로그램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가로막고 있는 현재 프로그램의 문제, 특히 실업보험제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 ③ 노동시장이 확대되기 시작할 때까지 ARRA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연장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 ■ 혁신적인 접근방식

미국 노동부는 ARRA 기금 지원 실행과 관련해 주와 현지 인력 부처에 보낸 지침에서 촉진기금 투자가 “인력 제도의 혁신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원스톱서비스 제도의 혁신 및 실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이례적이며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다”<sup>3)</sup> 고 적고 있다. 미국 노동부는 주정부 및 각 지역 파트너와 함께 근로자와 고용주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운영기반 원칙을 마련했으며 그와 관련한 우선 순위를 조율해 왔다. 운영기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근로자와 고용주를 인력 개발 제도의 동등한 고객으로 간주한다.
- 근로자의 경력개발과 직장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노동시장, 교육훈련 간의 끊임없는 이동을 촉진한다.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청년층을 교육 및 훈련 기회에 연계시킨다.
- 교육과 훈련을 경제 및 지역사회 개발 전략에 완벽하게 연계시킨다.
- 평가와 인증을 다음 단계의 교육 및 고용 요건과 연계시킨다.

이러한 많은 원칙들, 특히 끊임없는 서비스 통합과 관련된 원칙들은 1998년 마련된 「인력투자법 (Workforce Investment Act : WIA)」의 근간을 구성하고 있다. 이보다 최근에 발표한 원칙 리스트는 보편적인 접근 및 근로 우선주의(work-first priorities)를 강조하지 않고 대신 수요 중심의 인적자본 개발과 현지 경제개발 및 교육기관과의 파트너십에 더 큰 역점을 두고 있다.

## 훈련 강조

ARRA는 훈련에 더 큰 역점을 두는 등 노동부가 각 주에 제시한 지침의 몇 가지 원칙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ARRA의 실업급여 현실화와 관련해서는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들에게 훈련수당 형태로 정기 주급인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주정부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ARRA는 주정부가 승인된 훈련과정을 밟고 있는 실업급여 청구자에 대한 수당을 확대할 경우 제공되는 70억 달러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주에 제공한다. 이 인센티브를 받는 주정부는 최초 26주간 정기 실업급여를 다 받은 뒤 승인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추가로 26주

3) U.S. Department of Labor,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Training and Employment Guidance Letter No. 13-08, March 6, 2009, p. 2.

동안 청구자들이 통상 받는 금액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훈련수당이 정규 직원의 소득보다는 약간 낮은 경우도 있지만 OJT와 직업훈련 동안 훈련 참가자들은 직원처럼 급여를 받는다. 무역조정지원(Trade Adjustment Assistance)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제공하는 훈련수당과 유사하다. 지금까지 22개 주가 실업수당 현실화 인센티브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으나 3개 주만 훈련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했다. 이 제도에 관심이 부족한 이유는 이를 도입하는 주의 경우 비용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노동부는 주정부와 함께 고용주와의 OJT 계약 확대 등 WIA 고용 및 훈련기금의 혁신적인 사용을 촉진해 왔다.<sup>4</sup> 최근 노동부는 OJT 경험을 통해 실직자들이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업무 기술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ARRA 기금 중 9,000만 달러를 주정부와 파트너 기관에 제공했다. 또한, 주정부는 기존 근로자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직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훈련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ARRA는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 학부생과 특정 대학원생들에게 수요에 따른 보조금을 제공하는 연방 펠 그랜트 프로그램(Federal Pell Grant Program)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했다. 학생들은 참여하는 약 5,400개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이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다. ARRA는 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펠 장학금 상한선을 2009년 4,850달러에서 5,350달러로 늘리고 2010년에는 이보다 더 늘리기 위해 171억 달러를 제공한다. 또한, ARRA는 기존의 고등교육 공제(Hope Tax Credit)와 학자금 공제 규정을 학자금 2,000달러 및 해당 납세연도 지출 비용(책값 등) 100%에 대해 공제 혜택을 주는 새로운 교육비 공제(Opportunity Tax Credit)로 대체했다. 해당 금액을 지출한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공제액의 40%를 환급 받는다.

### 수요 중심의 훈련, 분야별 정책, 파트너십

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신규 산업 취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ARRA를 통해 고성장 신산업 분야의 근로자 훈련 및 연수를 위한 경쟁력 강화 보조금 프로그램에 7억 5,000만 달러를 지원한다. ARRA

4) Jane Oates' Testimony, April 14, 2010, p. 13.

는 이 7억 5,000만 달러 중 5억 달러를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부문 직업에 대비한 근로자 훈련 프로젝트에 배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러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공공 인력제도와 노사 파트너십, 교육기관, 지역사회 및 종교 단체, 연구기관 등 기타 공공 및 민간 제도 간 파트너십이 에너지 효율 및 재생가능한 에너지 부문과 기타 산업 분야의 인력 수요를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는지 입증하는 기회로 생각한다.<sup>5</sup>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신생에너지 효율 및 재생가능한 에너지 일자리가 정의되며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훈련시키기 위한 협력 활동이 추진된다. 주정부는 민간 및 공공 파트너들과 협력하며 기존, 신규, 신생 직업의 업무역량 요건에 대한 정보를 조율 및 수집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경기침체와 ARRA 입법 이전에도 연방정부와 몇 개 주는 파트너십 장려와 지원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미국 노동부는 인력, 경제개발, 교육의 통합적인 현지 접근방식에 대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경제개발을 위한 인력혁신(Workforce Innovation i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 WIRED) 프로그램을 후원했다. WIRED의 궁극적인 목표는 근로자의 고용 및 발전 기회를 확대하고 고속권 고소득 기회 창출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현재까지 WIRED 전략은 3세대에 걸친 지역 협력에 재원을 제공했으며 39개 지역은 3년에 걸쳐 500만~1,500만 달러를 지원 받았다. 다른 몇 개 주 역시 유사한 정책을 실시했다. 미시건의 지역숙련연대(Regional Skills Alliance)와 캘리포니아의 지역인력대비 및 경제개발법(Regional Workforce Prepar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Act)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미시건 주의 정책 입안자들은 기술협력에 중요성을 두었고 상당한 주정부 예산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최근 이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현지 인력투자위원회 역시 근로자 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파트너십에 역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펜실베이니아에 위치한 리하이밸리 WIB(Lehigh Valley WIB)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ARRA 기금을 사용해 지역 주민들이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펜실베이니아 주의 지역 전문대학들은 이미 실직자에게 1학기 동안 무료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추가로 교육을 받을 경우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비용, 책값을 부담해야 했다.

5) U.S. Department of Labor,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Training and Employment Notice 44-08, May 15, 2009, p. 2.

리하이벨리 WIB는 학생들이 교육을 계속 받기 원활 경우 이들에게 추가로 최대 3학기 동안 등록금, 책값,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다른 예는 오하이오 클리브랜드 외곽에 위치한 로레인 카운티 인력개발청(Workforce Development Agency)이 현지 고등교육기관과 체결한 파트너십이다. 이들은 ARRA 기금을 이용해 원스톱 안내 및 상담, 직업인식 활동, 지역 거주자를 위한 장학금 및 기타 재정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력개발(Stimulate Your Career)」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

## 성과 모니터링

ARRA와 현재의 경기침체가 연방 인력제도 운영에 변화를 촉발시킨 또 다른 분야는 성과 모니터링이다. WIA에 의거 모든 주는 미국 노동부와 연방 인력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 목표를 협상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협상한 성과 목표는 급속한 실업률 증가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침체로 구직자 숫자가 늘어나자 주와 지방관청은 대규모의 구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자 미국 노동부는 성과 목표 결정방식을 변경했다. 이제 전국적인 연방 인력개발 프로그램 성과 목표는 전국 실업률 변화에 따라 조정된다. 향후 2년간 주와 지역의 WIA 프로그램 성과 목표 역시 유사한 방법을 사용해 이러한 외부 요인을 고려해 조정될 것이다.

## 자원 집중화 및 증거 기반의 의사결정

미국 노동부는 주와 지역의 인력개발 부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장려해 왔다.

-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직자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에 기금 사용을 집중
- 실직자 서비스 실행과 재고용 서비스 및 실업보험제도를 통합
- 데이터 중심의 상담과 평가를 서비스 전략에 통합
- 진입 지점과 상관없이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간편하고 끊임없는 접근을 제공

이러한 제안들은 수단이 만료될 가능성이 있는 실업급여 청구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을 서비스로 안내하는 등의 기존 제도 개선을 담고 있다. ARRA는 주정부가 프로파일 모델을 개선하도록

추가적인 기금을 제공한다. 이 모델에 근거해 실업급여 수급자 프로파일링제도(Worker Profiling and Reemployment Services : WPRS)는 통계적 방식을 사용해 실업급여가 만료될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를 파악한다. 노동부의 지원과 기금을 바탕으로 일부 주정부는 특정 특징과 고용경험이 있는 수급자에게 어떤 서비스가 가장 효과적인지를 파악하는 통계 알고리즘을 WPRS에 도입했다. 캔사스와 조지아 주는 업존고용연구소(Ujohn Institute) 지원을 바탕으로 이러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sup>6</sup>

데이터품질전략(Data Quality Initiative)은 행정 데이터를 사용해 정보를 기반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다. ARRA는 주 교육기관이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학생 개인의 데이터를 관리, 분석, 분류, 사용하는 주 전역의 장기 데이터 시스템을 설계, 개발, 실행”할 수 있도록 각 주에 2억 5,000만 달러를 지원한다. 이 기금은 초중고 교육(K-12) 데이터와 함께 고등교육과 인력 정보가 포함된 주 전역의 데이터 시스템에 사용될 것이다. 실업급여 기록(모든 가입 근로자의 소득과 고용 내역을 기록한)과 교육 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연방과 주의 노동 및 교육 부처 간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업 성과와 인력 성과를 연계시키는 장기 데이터 시스템을 마련해 의사결정권자와 각 개인에게 운영 및 전략적 정책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 실업보험제도 개선

연방-주 실업보험제도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개인과 가정을 위한 1차 사회안전망이다. 하지만, 미국 노동부는 부분적으로는 주법의 자격제한 요건 때문에 실직자 10명 중 3명 이하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게 되는 주도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ARRA에 의거 도입된 연방 실업수당(Unemployment Compensation : UC) 현실화 규정은 이러한 제한적 관행을 바꾸는 주에게 인센티

6) 2005년 이후 미국 노동부는 UI 수급자의 재취업 결과를 개선하도록 주정부를 독려했다. 재취업 및 자격 평가(Reemployment and Eligibility Assessment: REA) 전략은 경쟁 시스템을 통해 UI 수급자와 원스톱 서비스 연계가 개선된 재취업 계획을 개발 및 지원하도록 보조금을 각 주에 지급한다.



브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많은 주가 주법을 변경해 이러한 규정을 도입했다. 그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① 파트타임 직업만 찾는 근로자에게 UC를 지급한다.
- ② 어쩔 수 없는 가족 문제로 인해 직장을 떠나야 하는 근로자에 대해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
- ③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할 자격을 갖추었으나 통상적인 UC를 모두 소진한 근로자에 대한 수당을 확대한다.
- ④ 주급 수당에 부양자 수당을 추가한다.<sup>7)</sup>

지금까지 지출된 70억 달러 중 3분의 1이 약간 넘는 금액이 32개 주에 지급되었다. 나머지 주와 지역은 받을 수 있는 몫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

## 단기 수당

취약한 경제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업무기술 면에서 뒤쳐져 있거나 고용주가 경쟁력을 유지할 정도의 생산성 개선이 부족해 일자리를 잃을 위협에 처해 있다. 대부분의 연방 및 주의 인력개발 프로그램의 서비스는 실직을 했을 경에만 근로자에게 제공된다. 많은 기업과 정책 입안자들은 일시해고를 피하고 안정적이고 혁신적이며 숙련도가 높은 인력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몇 개 주는 연방인력개발기금을 사용해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근로자들의 실직과 장기실업으로 인한 개인 및 사회적 비용을 피하기 위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러한 프로그램 중 하나는 단기 수당 또는 일자리 공유이다. 17개 주는 아직 일하고 있지만 일자리를 잃을 위협에 처한 근로자들에게 수당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일자리 공유라고도 불리는 이 방식을 통해 고용주는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일부 해고하기보다는 회사 내 모든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주가 근로자 실직의 '사실 또는 원인'에 대한 실업보

7) Training and Employment Notice, No. 27-09, U.S. Department of Labor, Continued Availability of UC Modernization Incentive Payments, January 29, 2010.

협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확대 사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최근 미국 노동부의 고용 및 훈련 담당 차관보의 진술은 노동부가 일시해고를 피할 경우 얻는 이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요건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심지어 일자리 공유에 참여하는 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sup>8</sup>

## 재정 건전성

최근의 경기침체는 실업보험제도에 상당한 압박을 주었다. 각 주는 경기침체 발생 시 증가하는 주의 예비비 수요에 잘 대비하지 못했다. 과거에 약한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몇 개의 주는 예비비 예산을 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주정부들은 경기침체 이전 역사상 가장 낮은 예비비를 보유한 채 현재의 경기침체에 돌입했다고 한다. 현재, 주정부들은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차입을 하고 있으며 연방정부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계속 차입하게 될 것이다. 이런 속도라면 선불금을 변제하고 주의 예비비를 다시 비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될 것이며 많은 주가 다음 경기침체에 대비하지 못하는 위협에 빠지게 될 것이다. 또한, 높은 부채 비율은 자금 이관제도가 아니라 보험 제도인 실업보험제도 원래 목적의 순수성을 훼손시킨다. 급여세를 인상, 연방지원 제공, 심지어 채무변제 탕감 등 실업보험제도의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경제가 일자리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할 시점에 세금 인상 비용이 너무 높고 이로 인해 일자리 성장이 늦춰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대규모의 연방 재정적자와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연방정부가 주정부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은 너무 관대한 처사이다. 현재 미국 노동부는 실업보험제도 건전성 회복을 위해 주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8) Statement of Jane Oates, Assistant Secretary for Employment and Training, U.S. Department of Labor, before the Committee on Finance, United States Senate, April 14, 2010, p. 8.

## ■ 맺음말

2009년 초 미국 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통과 이후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겠다는 미국의 고용전략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기본 접근방식은 경기침체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추가 기금을 제공하고 고용과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주와 지방정부를 지원하며 전통적인 인프라에서부터 의료정보기술과 스마트 전력선까지 모든 분야에서 정부의 직접 투자에 재원을 제공하고 개인과 기업에 세금 감면을 제공하는 것이다. 첫 번째 요소는 경기침체로 실직한 근로자와 가족들에게 재정 지원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며, 나머지 두 가지 요소는 신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 있다. 대부분의 주정부가 재정적으로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에 대한 재원과 가이드는 주로 연방정부가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인력개발 프로그램이 연방-주정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주정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자와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변화를 시행하고 보다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ARRA는 현재의 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재원을 제공하고 개인, 인력담당 직원, 교육기관, 정책 입안자들이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 개발을 장려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에 대한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촉진하고 서비스 제공 개선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 결과 새로운 전략이 시도된 것은 아니지만 노동부 지침은 지원 대상 참가자 수보다는 서비스의 품질, 수요 중심 훈련, 파트너십, 분야별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부의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많은 주와 지역의 인력부처는 증가하는 참가자 숫자에 대응하면서 이러한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왔다. **KLI**